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태연(앞줄 왼쪽) 공동의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우량주, 불량주 돼도 괜찮나” 李, ‘상법 개정’ 필요성 강조

### 민생연석회의 출범

분과별 이슈 발굴, 민생의제 정책 제시  
李 “주식시장 침체, 정부 무능때문”  
재계 반발엔 “얼마든지 타협 가능”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분과별 의제를 점검했다. 27일과 28일에는 무상교육·상법개정 등 민생과 관련한 일정이 또 있다.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인태연 전 청와대(문재인 정부)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는 당내에서 민생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분과별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매달 한 번 회의를 갖고 주요 민생 의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

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과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대한민국에선 저렇게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는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애초 상법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희한하게 다들 내놓고 말은 못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로 말할 땐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심해지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재계와 투자자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7일에는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28일에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 유죄라는 예측이 더 많았던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낸 모양새다.

비록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 무죄 선고를 계기로 그간 사법리스크에 가려졌던 ‘이재명표 먹사니즘’을 재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대표는 당분간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할 전망이다. 오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갖는 것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등 보수 원로와 만난 바 있다.

아울러 재판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 차기 대선주자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저녁 이 대표에게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자,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행사

취임 후 25번째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김 여사 특검법’으로만 한정하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그 위험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성과 중복 수사문제 등을 이유로 특검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개의 김 여사 특검법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 1위로 꼽혔다. /서예진 기자

## 與, ‘기밀언덕법’ 당론추진

##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보호”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사항 등 담겨 노동계 “기존 노동법 적용 확대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밀언덕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를 열었다. 기밀언덕법은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자·플랫폼 종사자 등 직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원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한 법이다.

법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보수 미지급 예방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당내 노동전환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 들어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와 같은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며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들은) 노조라는 울타리도 없고 법적 울타리도 미비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기밀 곳 없는 형편”이라며 “오늘 국민 보고회는 앞으로 국민의 힘과 정부가 노동약자들이 기밀 수 있는 언덕이 되겠다는 다짐의 자리이자 노동분야 격차해소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자리”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노동법 체계로는 이분들이 겪는 고초 해결하

거나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서 변화의 성과 체감할 때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당과 합심해서 국민들께 (기밀언덕법)을 널리 알리고 야당 의원들께도 적극 설명드려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산과 사업을 확대 개편해서 노동 현장을 따뜻하게 만들도록 특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밀언덕법’ 제정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법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윤석열 정부 기밀언덕법 노동약자보호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말했던 노동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조 탄압과 반노조 정책에 불과했고 요란한 빈수레 정책뿐이었다”며 “대체 노동약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의미조차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노동약자가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를 말한다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노동과정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라면 해당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며 “노동자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표준계약서, 공제회보다도 ‘오분류’로 인해 배제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서예진 기자

## 친윤계-친한계, ‘당원 게시판’ 갈등 심화

친윤계, 당무감사 등 진상규명 촉구  
친한계, ‘한동훈 죽이기’ 공세 반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이름으로 약 900개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작성됐다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계기로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친윤계와 친한계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을 두고 발언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런 문제로 당에서 이견이 장기간 노출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연일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대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다시금 재현되는 모양새다.

친윤계는 당무감사 등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한 대표의 사과와 해명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친한계는 친윤계의 공세를 ‘한동훈 죽이기’라며 반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 행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뉴시스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비방글이 작성된 것이) 사실이라면 당 대표가 가족문제에 대해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윤 vs 친한 갈등에 가세하고 있다. /뉴시스